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BTO) 실시협약(안)

2022. 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공공투자분석센터
Public &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alysis Center

목 차

전 문	1
제 1 장 총 칙	1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1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2
제 3 조 (용어의 정의)	2
제 4 조 (협약의 해석)	11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12
제 2 장 기본 약정	12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12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13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13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14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14
제 11 조 (협약의 성실 이행)	15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15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15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15
제 13 조의2 (총사업비의 변경 등과 민자적격성 확보)	17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17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자원 조달) 17

제 15 조 (자본금의 조달 및 투입) 17

제 16 조 (자금차입) 18

제 16 조의2 (자금차입 금액의 투입) 19

제 16 조의3 (자금 차입 계약 시의 담보 설정) 19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19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19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 승인) 20

제 19 조 (공사비) 21

제 20 조 (공사기간) 21

제 21 조 (공사의 착수) 21

제 22 조 (공정관리) 22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22

제 24 조 (관련 법령 등의 준수) 22

제 25 조 (도급 ·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23

제 26 조 (위험물 및 저장물) 23

제 27 조 (문화재) 24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24

제 29 조 (지체상금) 25

제 30 조 (보험가입) 25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26

제 32 조 (기성검사) 26

제 33 조 (민원처리) 27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28

제 35 조 (건설사업관리) 28

제 35 조의2 (법정 정산 경비 등의 정산)	29
제 36 조 (부속사업)	29
제 37 조 (부대사업)	30
제 37 조의2 (실시계획 승인 후 부대사업 시행)	30
제 38 조 (예비준공검사 등)	30
제 39 조 (시설투자의 완료)	31
제 40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의 등록)	31
제 41 조 (조기준공)	32
제 42 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32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3

제 43 조 (운영비용)	33
제 43 조의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34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 계약)	34
제 45 조 (운영실적의 제출)	35
제 46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36
제 46 조의2 (유지관리 및 운영)	36
제 47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36
제 48 조 (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37
제 49 조 (경미한 사업)	37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38

제 50 조 (사업수익률)	38
제 51 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38
제 52 조 (사용료의 징수)	39
제 53 조 (추정물동량 및 추정 사용료 수입)	39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40
제 54 조 (재정지원)	40
제 55 조 (행정적 지원)	40
제 56 조 (사업 부지의 제공)	40
제 57 조 (보상업무)	41
제 58 조 (정부지원시설의 적기준공)	41
제 59 조 (수요위험의 처리)	42
 제 9 장 위험 분담에 관한 사항	 42
제 60 조 (위험 배분의 원칙)	42
제 61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 및 처리)	42
제 62 조 (주무관청의 귀책 사유 및 처리)	44
제 63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44
제 64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46
 제 10 장 협약의 종료	 46
제 65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46
제 66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47
제 67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50
제 68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50
제 69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51
제 70 조 (매수청구권)	52
제 71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52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52
제 72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52
제 73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53
제 73 조의2 (대체자의 선정)	53
제 74 조 (출자지분의 변경)	53
제 75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54
제 76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55
제 76 조의2 (자금재조달 여건 보고 및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 등)	56
제 12 장 분쟁의 해결	56
제 77 조 (분쟁의 해결)	56
제 77조의2 (중 재)	57
제 13 장 기타 사항	57
제 78 조 (변경 실시협약의 체결과 재무 모델의 반영)	57
제 78 조의2 (본 협약 변경 제안 등)	58
제 79 조 (협약의 수익자)	59
제 80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59
제 81 조 (일부무효)	59
제 82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59
제 83 조 (정보공개 및 비밀유지)	59
제 84 조 (통지)	60
제 85 조 (언어)	61
제 86 조 (준거법)	61
제 87 조 (협약의 효력)	61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1선석)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전 문

해양수산부 장관(이하“주무관청”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는 BTO 민간투자사업으로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1선석) 시설의 건설·운영함으로써 부산항의 항만물류 부가가치를 부산항 신항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해양수산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이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1선석) 시설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한 자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1선석) 제3자 제안공고”(이하 “제3자 공고”라고 한다)를 0000년 00월 00일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해양수산부는 0000년 00월 00일 “(가칭)000000000주식회사” 출자예정자 컨소시엄을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본 실시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다.

해양수산부와 사업시행자 및 출자예정자¹⁾들은 본 사업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 ① 본 실시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1선석)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요청공고 (이하 “제3자 제안공고”라 한다)에 따라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1선석) 민간제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가칭)000000000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간에 합의된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출자예정자는 본 실시협약의 서명주체로서의 지위에 기초한 협약상 의무자이며 사업시행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본 협약상 권리와 의무는 사업시행자(사업시행법인)에 승계된다.

② 본 사업의 범위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사 업 량	비 고
양곡 부두	① 규모: 5만톤급(300m), 조성부지 75,000㎡ 내외 ② 시설: SILO등 저장창고, 하역 및 이송설비, 운영동 등	제4차 부산항 기본계획 변경(2022.2)

③ (사업시행의 범위)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작성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실시설계상의 공사내용으로 한다.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 ①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한다.
- ② 본 사업시설의 이용 및 기능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OOO시설을 부속사업(또는 부대사업)으로 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으며, 문맥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용어는 단수 및 복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민간투자법에 정의된 용어는 민간투자법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1. 개월 : 어느 역월의 특정 일자에 시작하여 해당 역월의 그 숫자의 상응 일자에 종료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역월에 숫자상으로 상응하는 날이 없는 경우 위 기간은 해당 역월의 최종일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개월의 산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2. 건설기간 :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건설기술진흥법 : 대한민국 법률 「건설기술진흥법」을 말한다.
4. 건설보조금 : 제54조(재정지원)에 따라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건설사업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6. 건설이자 :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준공시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협약에서 정한 이자 비용을

말한다.

7. 경미한 사업 :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단서 및 제49조(경미한 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8. 계열회사 : 사업시행자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국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공공투자관리센터 : 민간투자법 제23조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말한다.
10. 공사감리자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9호의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한다.
11. 공사 기간 : 본 사업시설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최종 준공 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2. 공사비 : 본 협약에서 규정한 공사비로서 <별표0>(총사업비)에서 정하는 공사비를 말한다.
13. 공사착수일 : 제21조(공사의 착수)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한 착공보고서상의 공사착수일을 말한다.
14. 관계기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15. 관리운영권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 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16.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17. 물동량 : 본 사업의 양곡 화물 총량을 말한다.
18. 교통영향평가 : 대한민국 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요구되는 교통영향평가를 말한다.
19. 국가계약법 : 대한민국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0. 기본설계 : 항만(부산항) 기본계획, 제안서 검토 등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

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²⁾.

21. 기준사용료 : 본 협약 제20조(기준사용료 및 결정사용료)에 정의된 사용료를 말한다.
22. 기준이자율 : 그 산정 시점(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기간의 기산일을 의미한다)의 직전 1개월 동안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신용평가등급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산술평균한율을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만약, 신용등급이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유통 수익율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 등급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유통 수익율을,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유통 수익율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유통 수익율로 대체한다. 만약,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회사채유통수익률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이자율로 사용하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 제12장(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3. 담보권 :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그밖의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4.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 : 채권금융기관이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또는 기관)을 말한다.
25. 매장문화재 : 대한민국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말한다.
26. 매장문화재법 : 대한민국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7. 물가변동비 : 총사업비 산정기준일인 2021년 10월 30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예정일까지 예상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별표0> (재무모델)상의 물가변동비를 말한다. 단 최초사용료 결정을 위한 물가변동비는 실제 준공시까지 발생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물가변동비를 말한다.
28. 민간투자법 : 대한민국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말한다.
29. 민간투자법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말한다.
30.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공고 등)에 의하여 공고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한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 공모, 기본설계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상의 용어 정의이다.

3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32.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 민간투자법 제44조의 3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한다.
33. 민원 : 본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건설 기간 및 운영기간 동안 민원인이 주무관청 또는 사업 시행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요구하여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거나 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4. 민자 적격성 재조사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8조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에 재검증을 의뢰하는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말한다.
35. 발굴조사 :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청이 명하는 보존조치로 정밀 발굴조사, 시굴 조사,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로 구성된다.
36. 법령 :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한다.
37. 법령 등 : 법령 및 정부의 고시, 지침, 훈령 그밖의 정책을 포함한다.
38. 법정 정산 경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른 각종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비,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비 등 해당 법률에서 경비의 정산 규정을 두는 경비를 말한다.
39. 보조금 : 민간투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하나로서 법령등 및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의 보조금을 말한다.
40. 본 사업 : 본 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41. 본 사업부지 :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여기서 부지라 함은 토지, 공유수면, 수로, 지표, 지상 및 지하를 포함한다.
42. 본 사업수입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부속사업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을 말한다.
43. 본 사업시설 :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실시계획에 의하여 특정되는 부두 시설 및 운영설비로서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이하 본 시설이라 한다).
44. 본 협약 : 본 실시협약을 말한다.
45. 부두 시설 : 본 사업시설 중 준공시 정부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하며, 항만법상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운영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46. 부두 지역 기반시설 : 부두지역 내의 간선도로포장, 상수도인입, 전기인입선로, 통신 및 가스 등 제반공공시설 또는 공급시설, 기타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부두 내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국가가 공사를 시행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47. 부대사업 :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른 000시설 사업으로서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말한다.
48. 부대사업시설 : 부대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49. 부속사업 : 부속시설의 운영, 임대 등의 사업을 의미한다.
50. 부속사업 수입 : 사업시행자가 부속시설의 사업을 통하여 얻는 수입을 의미한다.
51. 부속시설 : 본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000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52. 분기 : 해당연도의 1월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1일부터 9월30일 또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53. 불가항력 사유 : 협약당사자 어느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제72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정한 사유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로 인해 본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유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
54. 사업제안서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0000년 0월 0일자로 주무관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하며, 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55. 사업 기간 : 본 협약체결일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6. 사업수익률 : 본 협약 제50조(사업수익률)에서 정한 세전 실질수익률을 말한다.
57. 사업시행자 :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00주식회사를 말하며, 상호는 변경될 수 있다)를 말하며, 적법한 포괄 또는 특정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58. 사업연도 :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연도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종료 년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59. 사업이행보증 : 본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본 사업시설의 적기 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납부 또는 제출하는 현금,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 등을 말한다.
60. 사용료 :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및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요금(또는 하역료)을 포함하여, 그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타인으로부터 본 사업시설을 사용한 대가로 징수하는 모든 사용료, 요금 및 대가를 말한다. 다만, 하역료 외에 기타 사업시행자가 징수하는 항만운송사업요금(검수료, 감정료, 검량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1. 사용료 수입 : 본 사업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말한다.
62. 설계 : 기본설계, 실시설계와 이에 부속되는 시공도면을 총괄하는 의미를 말한다.
63.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이 통계청 홈페이지의 국가통계포털을 통하여 공표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통계청이 지수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경우, 개편 시점이 속하는 기간부터 개편된 지수를 적용한다.)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64.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 2020년 10월 30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본 협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한다.
65. 수요예측 제조사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7조(수요예측의 제조사)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에게 의뢰하는 수요예측의 제조사를 말한다.
66. 시공자 :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67. 시굴조사 :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8. 실시계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 계획을 말한다.
69. 실시설계 :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

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 및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는 것을 말한다.

- 70. 영업일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소재 금융기관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 71. 운영개시일 : 관리운영권에 따라 운영이 시작되는 날을 말한다.
- 72.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 73. 운영년도 : 운영기간 중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최초 운영년도는 운영개시일로부터 당해 연도의 12월31일까지로 하고 최종 운영년도는 사업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사업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74. 위험물 : 인화성, 발화성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동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수량과 관계없이³⁾ 본 사업에 현저한 손해 또는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물질을 의미한다.
- 75. 유지관리 :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 76. 인·허가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어 정부, 주무관청 그 밖의 관계기관이 행하는 허가, 동의, 인가, 승인, 승낙 등을 말한다.
- 77. 일 또는 날 : 오전 0시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0시에 끝나는 연속적인 24시간의 기간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표준시를 말한다.
- 78. 자(者) : 개인, 회사, 합작사, 법인, 공동투자회사, 조합, 신탁, 비법인단체 또는 정부의 기관을 말한다.
- 79. 자금재조달(Refinancing) :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⁴⁾.
- 80.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대이익 증가분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⁵⁾.
- 81.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 민간투자법령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

3)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일정한 수량(지정수량)에 해당하는 인화성, 발화성 등의 물질을 위험물로 정의하고 있다.

4) 실시협약 체결 당시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자금재조달 정의 규정을 보완할 수 있다.

5) 실시협약 체결 당시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정의 규정을 보완할 수 있다.

터의 장이 공표하는 자금재조달에 관련된 세부사항들에 대한 지침을 말한다.

- 82. 자금조달 : 사업시행자가 본사업에 필요한 민간투자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여 출자자로 부터의 자본금 출자와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포함한다.
- 83. 자금차입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채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 84. 자금차입계약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본 협약상의 총민간투자자금 중 자본금으로 조달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조달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등과 체결한 각종 대출약정 및 계약 등을 말하며, 타인자본에는 사업시행자의 출자자가 대출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 85. 자본금 : 본 협약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출자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출자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 86. 재무모델 : <별표0>(재무모델)에 제시된 컴퓨터 프로그램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⁶⁾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협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한 재무모델을 포함한다.
- 87. 전문기관 :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기관 중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88. 정밀 발굴조사 :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89. 제3자 제안공고 : “해양수산부 공고 제○호(○○○○년 ○월 ○일)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제3자 제안공고”를 말한다.
- 90. 제반공급 : 본 사업시설에 공급되는 전기, 통신, 가스, 상수 및 유류 등의 제반공급을 말한다.
- 91. 제세공과금 : 본 사업에 대한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공과금과 그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 92. 준공 : 본 협약 및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 93.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른 공사기간 변경(연장 또는 단축)시 그 변경기간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 94. 준공일 : 주무관청이 본 협약 제00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6)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작성한다.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사실을 인정한 날을 말한다.

95. 준공전 사용인가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전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96. 준공확인필증 : 본 협약 제00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따라 주무관청이 발행하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97. 지장물 : 본 사업시설 공사의 시행을 현저히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유형물로서 수중, 지상 또는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
98. 지표조사 :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99. 채권금융기관등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민간투자 자금을 조달할 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서 연기금 또는 민간투자법상의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자를 포함한다.
100. 총민간사업비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 중에서 본 협약에 따른 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금액을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하며, 그 내역은 <별표0>(총사업비)에 명시된 바와 같다.
101.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 물가변동비, 건설이자의 합계금을 의미한다.
102. 총사업비 :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총액이며,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그 내역은 <별표0>(총사업비)에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103. 총사업비 검증 관련 기관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8조에 따라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주무관청의 의뢰로 공사비의 적정성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수행하는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관련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104. 최초사용료 : 본 협약에 따라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사용료를 말한다.
105. 추정 사용료 수입 : <별표0>(추정 사용료 수입)에 명시된 특정 운영년도 사용료 수입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106. 출자자 :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제00조(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른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107. 출자예정자 :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단계에서 법인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108. 타당성 분석 : 본 협약 체결 이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수요예측 제조사의 후속 절

차로서 또는 민자 적격성 재조사 절차에서 수행하는 타당성 분석을 말한다.

- 109. 표본조사 :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110. 항만 기본시설과 항행보조시설 : 항만 기본시설은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부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항로 등을 말하고, 항행보조시설은 항만법 제2조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 신호, 조명, 항무통신시설을 말한다.
- 111. 항만시설 :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을 말한다.
- 112. 항만시설사용료 :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중 사업시행자가 징수하는 접안료, 화물체화료,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특수창고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 113. 항만운송관련사업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및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항만운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등을 말한다.
- 114. 항만운송사업 :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및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따른 사업(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을 말한다.
- 115. 해지일 : 본 협약의 중도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또는 주무관청의 매수인정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말한다.
- 116. 협약당사자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본 협약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출자에정자를 포함)를 말한다.

제 4 조 (협약의 해석)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은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해석된다.

- ① 본 협약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법령 등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령등을 말하며, 그 개정 및 타 법령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본 협약상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③ 본 협약을 해석할 때 각 조항의 표제는 편의상 기재한 것일 뿐이어서, 계약의 일부가 아니며 해석상 기준이 될 수 없다.

- ④ 본 협약상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
- ⑤ “등”이라 함은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유사한” 또는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 ⑥ 본 협약에서 조, 항, 호, 표 또는 별첨이 언급될 때에는, 명백히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들어 있는 조, 항, 호, 표 또는 부록을 의미한다.
- ⑦ 협약당사자 및 시공자, 감리자, 채권금융기관, 그 밖의 본 협약상 어느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 ⑧ 본 협약상 주무관청에 대한 언급은 주무관청이 그 권한을 하부 행정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그 권한을 수임 또는 수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 ⑨ 본 협약상 기간의 계산은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 ①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그밖의 서류들은 본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그 전에 협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 ②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 점이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한다.
 1. 민간투자법
 2. 민간투자법시행령
 3.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제3차 제안공고안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2 장 기본 약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본 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가칭)OOOOOO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18조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협약에 달리 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출자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 참여가 곤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본 사업부지 내에 국·공유 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사용⁷⁾.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의 사유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수익
4.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 또는 징수
5. 항만운송사업 중 항만하역사업 등 부록 8(추정사용료수입)의 수입에 반영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
6. 본 협약 제49조(경미한 사업)에 따라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

-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은 본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포함한 민간투자법령 등과 제반 법령등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본

7) 국·공유 재산을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 규정에 의거 무상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나, 반드시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상의 행정재산의 대부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부록 0(추정물동량)에 명시된 추정물동량의 차질 없는 처리를 위하여 물동량 유치를 위한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의 준공 6개월전에 물동량 유치활동의 실적 및 성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자금조달, 그밖의 본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제시한 채권금융기관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까지 대출약정서로 변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 ① 본 사업시설 중 부두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부두시설과 관련된 운영설비 및 기타 항만법시행령 제17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열거된 국가 귀속 대상 외의 항만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한다.
- ②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매수청구에 따라 매수되는 경우 또는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권한과 시설 자산(설비 및 지적재산 포함)의 귀속은 본 협약 제00장(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00년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시설이 준공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동안 본 사업시설을 무상사용할 수 있고,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부분준공된 부두시설의 운영을 허용받은 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이 전부 준공되는 날까지 부분준공된 본 사업시설을 무상사용할 수 있으며, 부분운영의 기간은 제1항의 무상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준공전 사용의 경우에도 같다.
- ④ 본 협약 제00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의 등록) 제0항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조기 준공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

하여 운영을 허용하고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권을 부여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기준공일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가 본 시설을 조기준공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날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동안 본 사업시설을 무상 사용할 수 있고, 동 기간은 제1항의 무상 사용기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11 조 (협약의 성실 이행)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등을 준수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총사업비는 <별표0>(총사업비)와 같이 2021년 10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0000]억원이며,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 금[00]억원을 제외한 금[0000]억원을 총민간사업비로 한다.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 ① 본 협약 체결 시에 확정된 총사업비는 변경하지 않는다.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한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면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1.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
 2.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법령, 정부가 제정하는 설계기준, 설계규칙 및 지침(민간투자법, 조세관련법령 등을 포함한다)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4.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인·허가 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 그밖의 민원의 처리방안으로서 제33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

업비가 증감하는 경우

5. 공사범위 변경 등 그 밖의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6. 본 협약 제00조의0(법정 정산 경비 등의 정산)규정에 따라 경비를 정산하는 경우

- ② 협약 체결시 확정된 감리비 금액보다 사업시행자와 감리자와의 실제 감리계약에 의한 감리비 금액이 더 낮아 감리비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상의 총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한다.
- ③ 총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내용·성능·규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 ‘신규비목’이라 함)은 신규 비목의 설계가를 산출한 후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가와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④ 제00(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를 변경하기로 하는 경우, 본 협약 제00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의한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총사업비 변경부분에서 제외한다.
- ⑤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 검증 관련기관에게 민간투자법,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비의 적정성 및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⑥ 중대한 설계기준, 공법 변경은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한다. 다만,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위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 ⑦ 제1항에 의하여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제00조 제0항에 명시된 건설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조정된 건설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와 병행하여 협약당사자는 사용료 조정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으로 해당 사유의 해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협약당사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의해 사용료를 조정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00장 분쟁의 해결’에 따라 해결한다.
- ⑧ 협약당사자는 본 조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 사유로 합의하는 경우 제00조(변경 실시협약의

체결과 재무모델의 반영)에 따라 재무 모델에 반영한다.

제 13 조의2 (총사업비의 변경 등과 민자적격성 확보)

-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체결 이후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물량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본 사업의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또는 제3자 제안공고)와 비교하여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자적격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② 협약당사자는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민자적격성재조사를 실시한 후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자원 조달)

- ① 본 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원의 조달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추진하며 본 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의 자원 조달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본 협약과 재무모델에서 제시한 자금조달 조건을 최대한 준수하여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시까지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자금 조달과 관련된 출자약정서 및 자금차입계약서 등 자금조달 관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 15 조 (자본금의 조달 및 투입)

- ① 사업시행자는 총민간투자비의 00% 이상⁸⁾을 자본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출

8)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출자자의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설기간 중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1. 기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의 사업시행 법인에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부문이 100분의 40이상 출자하고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경우, 100분의 5로 하향 조정가능함
2. 사업위험이 낮아 자기자본비율의 하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공공부문 출자, 보험가입 등 안정적 민자사업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경우, 100분의10으로 하향 조정가능함.(다만, 해지시지급금 산정시에는 최소 100분의 15이상의 최소 자기자본비율 적용)

자(예정)자로 하여금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상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출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조(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변경 부분을 고려하여 자금조달 계획을 변경한다.

- ③ 본 협약 체결시 공사의 계획공정률을 반영한 자본금의 투입 일정은 별표00(약정투자금 투입 일정)와 같다⁹⁾.
- ④ 사업시행자는 건설 기간 동안 제2항의 투입 일정에 따라 적기에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준공 시점에 총민간투자비의 00% 이상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어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동안 자본금 비율을 최소 00% 이상¹⁰⁾ 유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자금차입)

- ①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자금차입 계약이 본 협약과 재무 모델에서 정한 자금차입 조건과 비교하여 차입금액, 차입금리, 원리금 상환기간 또는 부채상환금 적립조건 등에 현저한 변경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거나 별도로 주무관청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선순위채 조달을 위한 자금차입계약을 출자자와 체결하는 경우, 차입금리는 출자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경쟁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는 금리를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만약 출자자로부터 선순위채를 조달하고자 한다면 선순위채 중 출자자로부터의 조달 비중을 70% 이내로 하도록 노력 한다¹¹⁾.
- ③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또는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달리 후순위채를 조달하는 경우 후순위채에 대한 상세 조달계획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주무관청이 후순위채 조달계획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조정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9) 실제 공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0)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최소 100분의 10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사업위험이 낮아 자기자본비율의 하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공공부문 출자, 보험 가입 등 안정적 민자사업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총 민간투자비의 100분의5로 하향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해지시지급금 산정시에는 최소 100분의 10이상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을 적용)

1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5조의 2에서는 총사업비가 5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 이 조항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사업비 5천억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이 조항의 취지를 최대한 살린다.

- ④ 본 협약 제00조(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가 조달사유, 자금차입의 규모 및 조달조건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00조(변경 실시협약의 체결과 재무모델의 반영)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협약 및 재무 모델을 변경하도록 한다.

제 16 조의2 (자금차입 금액의 투입)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차입금액을 별표00(약정투자금 투입일정)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제 16 조의3 (자금 차입 계약 시의 담보 설정)

- ①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등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차입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포함한 담보약정에 관한 제반 서류들을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한 결과 본 협약이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등과의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사유의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시에 관련 법령 등, 본 협약, 제3자제안공고(질의답변서 등 포함),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는 본 협약 체결시 실시설계 수행을 위해 보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인·허가등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 승인)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체결일부터 00일 이내¹²⁾에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서류(소요 재원 확보 대책, 자금조달 협약서 포함)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00일 범위내에서¹³⁾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 ③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에 규정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보고서
 2. 자금차입계획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다만, 금융기관의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체결일 이전에 이미 시행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④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그 신청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¹⁴⁾,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정하여 수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00일 이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승인한 실시계획 내용(첨부서류 및 도면 포함)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을 적시하여 주무관청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다만,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

12) 민간투자법 제13조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다.

13) 민간투자법 제13조에서는 최대 1년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되고 있는데, 주무관청은 '공사시방서, 공사비의 산출 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관련 제반 도서 등'이 '실시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기조달한 자금 또는 기투입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⑦ 제2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 시행에 관한 책임은 주무관청에 이전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제 19 조 (공사비)

공사비는 <별표0>(총사업비)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21년 10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00]억원으로 한다.

제 20 조 (공사기간)

-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00개월로 한다.
- ②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한 만큼 제1항의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다.
-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그밖의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의 착수시기 연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1 조 (공사의 착수)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 관련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00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착공보고서를 공사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착수일로부터 00개월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2 조 (공정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진도율 및 기성 관리 등 공정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매월 및 매분기 별로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정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공사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 00월말까지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전체 공정 및 차기년도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과 공사착수일로부터 분기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실적 누계공정률이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의 누계 계획공정률 대비 90%¹⁵⁾ 미만인 경우 부진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정계획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된다.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 ①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설계 또는 시공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예정)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설계자, 시공자와 본 협약 및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설계, 공사의 수행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즉시 도급계약의 체결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급인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3자제안공고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수급인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¹⁶⁾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제 24 조 (관련 법령 등의 준수)

-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설계 또는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5) 기존 실시협약의 경우 대체로 85%나 90%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 공정률과 계획공정률과의 차이를 가능한 한 좁게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 엄격하게 공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본 표준안에서는 90%로 설정하였다.

16) 평가단계에서 확정된 자 아닌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사감리자는 시공자 및 하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25 조 (도급 ·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체불노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관련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급 · 하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1항의 체불노임 등 수급인에 대한 제반 채무의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시정명령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 ④ 주무관청은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설계, 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본 협약의 해지시 주무관청에 의한 관련 계약 승계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 26 조 (위험물 및 지장물)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지하 위험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그 이설 여부 및 공사 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 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또는 지장물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하고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또는 중화 및 지장물의 이설 등에 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합리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없었던 위험물이나 지장물의 발견으로 인한 처리비용에 대해

서는 제00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1항의 사유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27 조 (문화재)

- ①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 매장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표본조사, 시굴조사 또는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우선 부담한 후 제00조의 0(법정 정산경비 등의 정산)에 따라 정산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 ④ 문화재의 발굴조사로 인한 공사기간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제00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1항의 사유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본 사업시행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00조(입찰보증금) 제0항에서 규정하는 보증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¹⁷⁾. 다만,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00일의 범위 내에서 동 납부 또는 제출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이 대표출자자 또는 설립예정법인 명의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설립 즉시 그 명의를 신규 설립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본 사업시설이 매수되는 경우,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현금,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주무관청이 본 협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17) 본 조항은 보증금 또는 보증금에 준하는 지급보증서를 제시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보증서를 사업이행 보증금에 준하는 보증서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그 발행기관이 사업이행 보증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출된 보증서가 지급보증서로 효력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 주무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사업이행보증금 대상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1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납부하거나, 기 제공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대체하여 주무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29 조 (지체상금)

-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준공 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계약법¹⁸⁾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준공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상 계약금액은 총사업비¹⁹⁾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총사업비 가격 기준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을 의미한다.
-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지 못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밖의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제 30 조 (보험가입)

- ① 사업시행자는 <별표0>(보험내역)에 따라 보험에 직접 가입하거나 시공사 등으로 하여금 당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고²⁰⁾, 이들 보험이 사업 기간 동안에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보험계약서 및 관련 목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주무관청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 수령 내역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18)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로 변경할 수 있다.

19) 보상비를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경우 보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를 말한다.

20) 주무관청은 본 사업의 공사에 대한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보험 가입의 범위,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 보험가입시기 및 기간, 보험료 계상 및 보험요율 산정, 보험금의 사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업무 집행)에 따른다.

야 하며 동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설시공 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상황,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00일 이내) 주무관청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에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시기에 본 사업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00일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는 검사의 방법, 내용, 시기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제3항의 검사의 결과,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건설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소요되는 비용 중 주무관청의 감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조사 및 시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각각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제61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위탁 등을 통해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게되는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32 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 기성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33 조 (민원처리)

- ① 본 사업 시행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② 협약 당사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3자의 민원 또는 청구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일 이내에 상대방에 민원의 발생 사실과 발생 원인 등을 서면 통보한다.
- ③ 협약 당사자는 제2항의 서면 통보를 받은 이후 [*]일 이내에 민원의 처리 방법, 처리비용 등에 대해 협의하며, 사업시행자는 위 사전 협의한 내용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민원해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관계기관의 요구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 시, 민원의 발생 원인과 협약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민원의 처리 책임 주체와 민원처리 비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로 한다.
 1. 본 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으로 규정한 설계, 시공,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2. 본 실시협약에서 주무관청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제00조(보상업무)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민원 처리는 주무관청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는 분담비율을 협의하여 민원 처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 가. 민원이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여 책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 나. 민원이 제1호의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 영역에서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법규 위반 또는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
 - 다. 민원이 제2호의 주무관청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 영역에서 발생하였으나, 주무관청의 법규 위반 또는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
- ⑤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민원의 처리를 제외하고, 본 조에서 주무관청이 부담하기로 하는 민원처리 비용 중 협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충

사업비 항목으로 추가 반영하기로 한 경우 제00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제4호에 따라 추가 반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자본금 및 차입금의 추가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 ⑥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승인조건 등에 위배되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배상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⑦ 본 조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민원처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사업계획서 및 실시계획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 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책임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감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포함한다)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직접 시행하고 그 소요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35 조 (건설사업관리)

- ① 주무관청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격업체인 공사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공사감리자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금액은 주무관청에서 선정한 감리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으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 공사에 대하여 본 협약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공사감리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을 감독한다.

- ③ 공사감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실시체계,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에게 업무현황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공사감리자는 제00조(주무관청의 감독)에 따른 검사, 제00조(기성검사)에 따른 기성검사, 제00조(예비준공검사 등)에 따른 예비준공검사, 제00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수행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이로 인한 건설사업관리 추가비용은 총사업비 증가없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이로 인한 건설사업관리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제00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00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따른다.

제 35 조의2 (법정 정산 경비 등의 정산)

- ① 법정 정산 경비는 정산 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기로 한다. 다만 정산경비의 개별 항목별 증감을 반영한 정산경비 총액은 본 협약상 정산경비 총액을 초과하여 정산할 수 없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법정 정산경비, 제00조(문화재) 제0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및 제13조(총사업비 변경) 제2항에 따른 감리비 차액 정산 등 정산경비 정산이 발생할 때마다 주무관청에 정산경비 조정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6 조 (부속사업)

- ① 본 사업시설 중에서 부속시설로 추진되는 000시설의 시설규모 및 범위는 별표00(부속시설)와 같다.
- ② 제1항의 부속시설은 실시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하여야 하며, 시설물설치에 따른 인허가

업무는 사업시행자 주관 하에 시행토록 한다.

- ③ 제1항의 부속시설의 건설을 위한 공사비 등 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산정된다.
- ④ 부속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한다.

제 37 조 (부대사업)

- ① 부대사업으로 추진되는 00시설 사업 개요, 시설 규모 및 범위는 별표00(부대사업)와 같다.
- ② 제1항의 부대사업시설의 사업비, 운영비, 수입, 수익률, 이익, 주무관청의 지원사항 등 사업시행 조건은 별표 00(부대사업 사업시행조건)과 같다.
- ③ 제2항의 부대사업시설의 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에게 00:00 비율로 귀속시키되, 주무관청 귀속분은 본 실시협약 체결시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금 절감 등에 사용한다.
- ④ 부대사업의 시행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본 협약,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 ⑤ 부대사업시설의 공사비 등 사업비는 제00조(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의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대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한다.

제 37 조의2 (실시계획 승인 후 부대사업 시행)

- ①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이후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대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제안서가 접수된 경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1조에 따라 부대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수익성 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③ 협약 당사자는 부대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협약 제00조(변경 실시협약의 체결과 재무모델의 반영)에 따라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제 38 조 (예비준공검사 등)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0개월 전까지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사회기반시설 예비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0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통보일로부터 0개월 이내 동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9 조 (시설투자의 완료)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조기준공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기 전까지 운영계획에 따라 부두시설의 관리사무소, 출입시설, 운영설비 및 운영시스템 등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40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의 등록)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완공 후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 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준공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직접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완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완공검사의 일정을 통지하고, 주무관청은 완공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가 접수된 경우, 주무관청은 동 신청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본 협약에 위반한 점이 없고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다.
- ④ 제3항의 준공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시운전(성능테스트)을 실시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검사의 입회, 현장설명,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본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의 등록,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등 그밖의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⑥ 주무관청은 준공확인 결과 본 협약 또는 실시계획 승인시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반려하고, 구체적인 미비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사업시행자는 제6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보완한 이후에 신속하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⑧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

운영권)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 구체적 절차는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시행)에 따른다.

- ⑨ 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건설지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41 조 (조기준공)

- ① 협약상 준공예정일 이전에 본 사업시설이 준공된 경우(“조기 준공”) 준공일로부터 당초 준공 예정일까지의 무상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주무관청은 조기 준공의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 개시 시점을 앞당기거나(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이 앞당겨진 만큼 종료시점 역시 앞당겨짐) 조기 준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본 사업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²¹⁾

제 42 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본 사업시설 전체의 준공전이라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부분준공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아 이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부분 준공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 협약 제00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의 등록)의 준공확인 절차에 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분준공에 대한 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분준공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21) i) 관리운영권 개시 시점을 앞당기는 경우

사업 특성에 따라(환경사업 등) 수요위험이 없는 사업, 조기 운영으로 인하여 협약상 무상사용기간 중의 대수선비 등 운영비가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당초 준공예정일 보다 불과 몇 개월 앞당겨 준공되어 조기 준공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더라도 수요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ii) 위탁 운영하는 경우

협약상 준공예정일 보다 상당히 빠른 시기에 준공되어 당초 추정된 교통수요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조기준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본 사업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는 조기 준공일부터 예정 준공일까지는 운영비용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기 운영으로 인하여 협약상 무상사용기간 중의 대수선비 등 운영비 증가가 예상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 수익의 일부 공유(예: 50:50) 등 별도의 수익을 부여할 수 있음.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부분준공된 부두시설의 운영을 허용하고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권을 부여한다. 또한, 정부는 부분준공 후 사업시행자의 항만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법 등 타 법령규정에 의한 준공전 사용허가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의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위 허가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최초사용료 수준을 감안하여 부분준공된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적용할 사용료를 결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기로 한다.
- ⑤ 부분준공에 따른 운영기간동안 사용료의 순수입이 있는 경우, 그 순수입의 산정 및 처리방법으로서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총사업비 증가와 관련된 건설분담금과의 상계 또는 기준사용료 조정 등을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준공전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항만법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제4항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준공전 사용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43 조 (운영비용)

- ① 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2021년 10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원이며, 연도별 부문별 운영비용 내역은 <별표00>(운영비용)과 같다.
- ② 제1항의 운영비용 중 고정 운영비용은 금[]원이고, 그 연도별·항목별 내역은 <별표00>(고정 운영비용)과 같으며, 변동 운영비용은 금[]원이고, 그 연도별·항목별 내역은 <별표00>(변동 운영비용)과 같다.
- ③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감하는 경우 사용료,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등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²²⁾이 있는 경우
 - 2.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이나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의 이행으로

²²⁾ 본 협약 제00조 제0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인한 경우

3.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²³⁾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 ④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사유의 발생을 근거로 <별표00>(운영비용)에 규정된 운영비용을 변경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은 승인시 법령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 절감 여부를 고려한다.
- ⑤ 본 협약 제00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변경하기로 하는 경우, 본 협약 제00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운영비 변경 부분에서 제외한다.
- ⑥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효율적 경영으로 운영비용이 절감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용료의 인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

제 43 조의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 ① 협약당사자는 사업 기간 중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사용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을 조정하기로 한다.
- ② 본 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의 차입금액의 법인세 과세를 위한 실제 손금 인정 한도가 본 협약 재무 모델의 차입조건과 달리 확정된 경우 실제 확정된 손금 인정 한도를 재무 모델에 반영하여 사용료를 조정하기로 한다.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 계약)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시설물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고, 동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정(교통부속시설을 포함, 한국도로공사 유지관리규정, 유지보수작업 매뉴얼 등)에 준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그 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또한,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 유지보수를 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23) 본 협약 제00조 제0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 ③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전문운영회사²⁴⁾(이하“운영자”라 한다)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즉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의 체결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자 또는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3자제안공고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또는 체결할) 제1항의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과 관련된 조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수임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등 및 본 협약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을 유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본 협약 규정에 의거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제 45 조 (운영실적의 제출)

- ① 사업시행자는 매년 00월 00일까지 주무관청에게 본 항만에 대한 전년도 물동량 현황 및 통행 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물동량 현황 및 사용료 수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선정한 제3의 전문성이 있는 독립적인 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조사,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령, 기타 관련 법령 법령에 따라 양곡부두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 등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해당 양곡부두사업 건설유지비 총액, 취득한 양곡화물 등의 사용료 수입 총액 등에 관한 회계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일 때에는 감사인(監査人)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보

24)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제3자에 위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여기서 전문운영사란 시설사업기본계획 상의 운영사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46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을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 00일 전²⁵⁾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각 사업년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사업년도가 개시되는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관련 법령 등의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제 46 조의2 (유지관리 및 운영)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제00조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현장 조사, 사업시행자 조사, 본 사업시설 사용자의 신고 등에 따라 본 사업시설 이용가능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평가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사용자의 본 사업시설 이용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긴급 유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47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속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부속시설의 운영 수입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도록 부속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부속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매월의 비용, 수입 내역과 증빙자료 등 운영실적을 다음 월의 00일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운영실적이 정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 순이익을 확정한다.
- ④ 주무관청은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제3항의 운영실적이 정확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5) 가능한 한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이 개시되기 30일~60일 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주무관청은 제4항의 조사확인 결과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운영실적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하여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순이익을 확정한다.
- ⑥ 부속시설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 순이익이 별표00(부속시설의 운영 순이익)에 제시된 추정 운영 순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⑦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부속시설의 운영 순이익이 별표00(부속시설의 운영 순이익)에 제시된 추정 운영 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일정비율(00:00)로 분배하여 수익한다.²⁶⁾

제 48 조 (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대사업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② 부대사업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제00조(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준용하기로 한다.
- ③ 부대사업시설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부대사업의 실제 운영 순이익이 별표00(부대사업의 운영순이익)에 제시된 추정 운영 순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④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부대사업의 운영 순이익이 별표00(부대사업의 운영 순이익)에 제시된 추정 운영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일정비율(00:00)로 분배하여 수익한다²⁷⁾.

제 49 조 (경미한 사업)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 체결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내용 및 소요 비용과 예상 수입, 사업추진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부속사업 초과 이익 분배 비율은 유사 사업에서의 부속사업이익 규모, 주무관청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7) 부대사업 초과 이익 분배 비율은 유사 사업에서의 부대사업이익 규모, 주무관청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③ 사업시행자가 본조 제1항의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 및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 매 사업년도 회계감사보고서상에 당해 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 수입 내역 등을 표시하고, 매년도 3월말까지 직전 사업년도의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의 시행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업을 통해 얻은 매 사업년도의 순수익은 실제 사용료 수입에 포함한다.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제 50 조 (사업수익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00%(세후 00%)로 하고,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00조의0(법인세법 변경시 처리)에 따른 조정에 따라 세전 실질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 제00조(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에 따라 자금재조달 이익의 공유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1 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 ① 본 사업의 최초사용료는 <별표00>(곡종별 기준사용료)에 정한 바와 같이 정하되, 협약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최초사용료를 결정을 위하여 운영개시일 0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시설의 이용 방법 및 운영개시일에 적용될 실제 최초사용료
 2. 사용료산출 기초자료
 3. 사용료 징수 방법
 4. 사용료의 감면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5. 유사 시설의 사용료 수준 등
 6.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최초사용료 결정 이후의 사용료는 1년²⁸⁾에 1회 조정하고(조정 기준일은 최초 사용료 적용 또

28) 조정기간을 예시한 것이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는 사용료 조정 후 1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용료 조정시 적용할 사용료를 통계청 고시 [공공서비스 부문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²⁹⁾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사용료 조정 기준일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최종적인 사용료 조정 수준을 결정한다.

- ④ 불가항력 사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그 밖의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부담분 일부를 사용료를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약당사자가 사용료의 적절한 조정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제3의 전문성이 있는 독립적인 기관에 사용료 수준조정의 타당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의뢰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 52 조 (사용료의 징수)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기간동안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료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영업전략 등의 목적으로 제51조(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및 제52조(사용료의 징수)에 따라 산정 또는 확정된 결정사용료와 다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등 불법적 사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무관청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3 조 (추정물동량 및 추정 사용료 수입)

본 협약에서 사용되는 본 사업시설의 추정물동량 및 추정사용료수입은 부록 00(추정물동량)에 제시된 년도별 추정물동량 및 부록 00(추정사용료수입)에 제시된 2021년 10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의 추정사용료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29)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2조 제4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적용 가능한 물가지수를 예시한 것이다. 주무관청의 의사결정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을 적용할 수도 있다.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54 조 (재정지원)

정부는 필요 시 건설보조금을 제외하고 민간투자법 제53조,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7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또는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 55 조 (행정적 지원)

- ① 본 사업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 등의 필요한 행정절차(교통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포함)는 주무관청이 추진하며, 본 사업시설의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등은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며³⁰⁾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사항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

제 56 조 (사업 부지의 제공)

-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필요할 경우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의 소요계획과 보상 일정 및 부지의 인도 일정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다.
- ②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및 공정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본사업부지를, 이의 보상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가 완료된 후 즉시, 이의 보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 절차가 완료된 후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이 본사업부지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기간 동안 제세공과금 및 담보권의 부담 없이 부지에 대한 점유권, 무상사용권 및 그 밖의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사업부지에 대한 점유권, 무상사용권 및 그 밖의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법적, 사실적 부담, 제약이 있는지 사전에 법률 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실사 결과 발견된 법적, 사실적 하자를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0) 민간투자법상 인허가 등이 의제 되지 않는 인허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무이며 의제 되는 인허가 등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실시계획 승인에 있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승인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민간투자법 제17조 참조)

-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에³¹⁾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당시에 자신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세공과금 등을³²⁾ 조사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제세공과금이 추후에 발견되는 경우에 그 제세공과금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본 협약 체결 당시 제세공과금 관련 법령등이 없었던 경우 또는 제세공과금 관련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제세공과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었던 경우 등 본 협약 체결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제세공과금 등을 조사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주무관청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없이 본사업부지를 처분하거나 그 밖의 다른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이 공공의 목적으로 본사업부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⑦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본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의 사유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부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그 지연 기간에 상응하여 공사 기간이 연장된다.

제 57 조 (보상업무)

- ①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본 시설에 속하는 토지 보상, 어업권 보상, 기타 손실보상은 정부의 부담으로 보상한다.
- ② 제1항의 토지매수업무 등의 지연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 총사업비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이의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공동으로 기울여야 한다.

제 58 조 (정부지원시설의 적기준공)

- ①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의 부담으로 부록 00(정부지원시설 공사)에 명시된 항만기본시설 및 항행보조시설을 적기에 착공하여 공정에 맞추어 추진하고 준공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부분준공하거나 본 사업시설 전체를 조기준공하여, 본 사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계획에 따른 준공예정일 이전에 운영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정

31) 대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영향 받는 공익사업 등 기재함.

32) 예를 들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이 무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역시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는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록 00(정부지원 시설공사)에 명시된 항만기본시설 및 항행보조시설 등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항만기본시설 및 항행보조시설의 미비로 본 사업시설 전체의 운영개시일 (조기준공의 경우 실시계획상의 준공예정일 또는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에서 정한 처리시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처리시한 만료일. 이하, 이 항에서 '운영개시일'이라 한다) 이후 본 사업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정부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운영개시일로부터 상기 시설들이 준비되어 본 사업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손실에 대하여, 부록 00(추정사용료수입)에 명시된 추정사용료 수입에서 운영개시일로부터 본 사업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날의 전일까지의 실제 사용료 수입과 운영비용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용료,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등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 59 조 (수요위험의 처리)

본 시설의 이용에 따른 실제 발생수요가 본 협약에서 정한 본 시설의 예측수요와 차이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책임과 위험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제 9 장 위험 분담에 관한 사항

제 60 조 (위험 배분의 원칙)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 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약당사자간 해당 위험의 유형과 성격 규명 및 위험분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발생 사유가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지배범위에 근접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제 61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 및 처리)

-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부실시공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신청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신청 등이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합병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주무관청의 귀책 사유나 불가항력적 사유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을 위한 재원(자본금 및 자금차입)의 조달·투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6. 실시계획 승인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³³⁾
 7.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 승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 승인) 제4항 또는 제37조의 2(실시계획 승인 후 부대사업의 시행)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얻지 않는 경우
 8.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시를 지연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유지관리 및 운영을 중단한 경우
 9. 사업시행자가 제16조(자금차입), 제74조(출자지분의 변경), 제75조(자금재조달의 절차 등) 또는 제72조(양도 및 담보의 제공) 등 본 협약에서 정한 출자자 변경, 자금 조달 및 자금재조달에 관한 사항 또는 양도 및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무관청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10. 사업시행자가 제 76 조의2 (자금재조달 여건 보고 및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 등)에 따른 자금재조달 여건보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재조달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고 자금재조달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이나 수입손실에 대한

33) 경우에 따라 실시협약의 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중요한 계약을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제3자의 이행지연 또는 불이행도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여는 총사업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62 조 (주무관청의 귀책 사유 및 처리)

-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 본사업 시행권에 대하여 몰수한 경우
 2. 주무관청의 부지제공, 보상업무, 지장물 처리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³⁴⁾
 3.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 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주무관청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건설기간 중 그로 인한 치유 및 회복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사착수 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 기간을 연장하고 주무관청의 귀책 사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공사기간 중 총사업비 증가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운영비 증가분)을 배상하도록 한다.

제 63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 ① 사업기간 중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 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2.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 전반의 파업
 3.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정책의 변경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요구나 방침 등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 사용료보다 낮은 수준의 사용료를 징

34) 협약상 주무관청의 의무로 되어있는 경우에 한한다.

수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함.

5.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된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유로서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사유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중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3.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4.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③ 공사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해당 사유의 치유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공사 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 개시일을 연기한다.

2.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가. 비정치적 불가항력 위협으로 인한 경우 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80%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 결정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나. 정치적 불가항력 위협으로 인한 경우 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90%를 부담한다.

다. 위 ‘가’호 및 ‘나’호에서의 보험은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 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④ 운영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본 사업시설의 복구 등과 관련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비정치적 불가항력 위협으로 인한 경우 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80%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 결정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나. 정치적 불가항력 위협으로 인한 경우 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90%를 부담한다.

2.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해당 불가항력사유의 처리기간 만큼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만, 정부의 요구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주무관청이 이를 보상한다.

- ⑤ 제3항과 제4항의 보험은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실제 수령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보험계약 당시의 수령 가능한 보험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제3항과 제4항의 주무관청 부담분에 관하여는, 협약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사용료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하여 주무관청 부담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 ⑥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사업시행자의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융자 또는 단기차입에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 ⑦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피해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 64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청구내용을 적시하여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청구(“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청구”)를 한다.
- ②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청구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이의신청서가 타방 당사자에게 도착한 날로부터 00일 이내에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00장(분쟁의 해결)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청구의 내용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 10 장 협약의 종료

제 65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 ① 본 협약은 중도 해지되지 않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한다.
- ② 본 협약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 4년 전에³⁵⁾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³⁶⁾, 그 점검 결과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점검, 수리 또는 보수를 모두 완료한 후,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포함한 관리운영권의 대상인 사업시설 전체를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한다.
 3. 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할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등의 범위는 <별표00>(관리운영권의 인계)와 같다.³⁷⁾³⁸⁾
- ③ 제2항에 따라 인계한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제 66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 ①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 -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의 말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제61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1호의 사유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제61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2호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체상금이 총사업비의 []%를 초과하는 경우

3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4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시설의 유형별 특성과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54조의2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 시설 점검실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6) 이때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공동 검사를 제3자에게 위임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할 수 있다.

37)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본 사업시설(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최초로 구입 하는 운영설비, 동 기간 중 구입한 집기비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차량 등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을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로 규정가능하다.

38) 실제 협약체결 시 실시계획에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의 만료시에 본 사업시설의 반환 요건과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4. 제61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제61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5호의 재원조달이 []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6. 제61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6호의 공사착수 지연이 []개월 이상이 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개월 이상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61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7호의 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유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8. 제61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8호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거부 또는 중단이 []개월 이상인 경우
 9. 제61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9호의 자금조달 및 자금 재조달 또는 양도 및 담보 제공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의 반복적인 위반이 있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본 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 등 주무관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의 해지시지급금은 주무관청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지급금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11.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수요예측재조사, 민자적격성재조사 등으로 시행한 타당성 분석 결과, 타당성 판단 단계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무관청 또한 본 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단, 본 사업의 착공 이전에 수요예측재조사 또는 적격성재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의 해지시지급금은 건설기간 중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준하여 지급한다.
-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해지 - 다음 각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2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제62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2호,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³⁹⁾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3. 기타 본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주무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39)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9조의 매수청구사유에 준하여 6개월을 예시하였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발송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 다음 각호의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3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문화재와 관련한 고고학적 작업이나 위험물 발견으로 인한 예방책 또는 중화책이 시행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동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당해 지역 공사의 진행 또는 본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이 1년 이상 지체되거나 어느 협약당사자가 자기 의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⁴⁰⁾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금차입계약이 동 계약상의 기한 이전에 종료(또는 해지)되고 6개월 이내에 대체 자금 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단, 동 사유가 주무관청의 귀책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각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 ④ 본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본 협약을 해지하는 자가 부담한다.
- ⑤ 본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협약당사자(“해지권자”)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과 90일 이내의 기간(“치유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치유기간 내에 당해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73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지권자는 해지통지를 유보한다.
- ⑥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권리와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매수청구를 한 경우 주무관청의 매수

40) 실시협약시 변경될 수 있다.

청구인정 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에 본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67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 ① 제66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 시점에서 본 사업시설(건설기간 중인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관리운영권도 말소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을 주무관청이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내에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없이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사용 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을 취득, 인수한다.⁴¹⁾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과 함께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공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사 및 점검을 수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 이전한다.

제 68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 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별표00(해지시지급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 이 경우, 기투입민간투자 자금은 실제 기투입 민간투자금을 기본으로 하되, 실시협약상 당사자가 합의한 민간투자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69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환수할 환수금 중 미환수된 금액이 있을 경우 당해 미환수 금액은 해지시 지급금에서 차감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성이 있고,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조항에서 “독립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 ③ 제2항에 의해 선정된 독립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0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여 이를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독립기관에 의해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전

41) 무상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비품 등은 실시협약 체결시 특정한다.

액 부담하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 ⑤ 해지시지급금에 관하여 독립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00장(분쟁의 해결)의 절차에 따른다.
- ⑥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 1. 본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상당을 공제한다. 다만,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 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 2.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주무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주무관청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권금융기관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69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68조(해지시지급금의 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해지일 현재 미상환 원리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자금차입계약(들)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주무관청이 요청하는 시기에 본 사업시설 등 본 사업 관련 주무관청이 요구한 일체의 설비나 권리 등을 이전하기로 한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시설 등 본 사업 관련 주무관청이 요구한 일체의 설비나 권리 등을 이전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미지급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그 다음날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해지시지급금은 주무관청이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사업시행자는 해지시지급금을 지급받는 외에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의 중도해지로 인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주무관청은 관련 법령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제 70 조 (매수청구권)

-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유⁴²⁾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가 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에 본 사업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 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3.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 ②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가액(이하 매수가액 이라고 한다)은 해지시 지급금 산정 기준에 따라 사유별로 불가항력 또는 주무관청 귀책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 71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상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지 또는 매수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협약상 의무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원만한 이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제조달

제 72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 ① 민간투자법 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 ②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42)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9조가 정하고 있는 사유 중 4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규정하였다.

등에게 본 협약, 관리운영권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 계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상의 권리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위하여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기로 한다.

제 73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 73 조의2 (대체자의 선정)

- ① 제6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사유 발생을 통지한 후 치유기간 내에 당해 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어느 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통지를 한 경우, 채권금융기관(또는 대리은행)은 서면통지(“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사업자를 주무관청에 추천할 수 있다.
- ②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및 채권금융기관에게 추천된 대체사업자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통지한다.
- ③ 주무관청과 채권금융기관 및 수용된 대체사업자가, 주무관청의 대체사업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항에 언급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자금차입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사유의 시정을 위한 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한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취소하는 서면통지(“취소통지”)를 보낼 수 있고, 주무관청 또한 대체사업자의 수용을 취소(“수용취소”)할 수 있다. 취소통지나 수용취소가 있는 경우, 또는 대체사업자가 본조 제2항에 따라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자는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당사자들의 권리는 마치 추천통지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 협약에 따라 결정한다.

제 74 조 (출자지분의 변경)

- ①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의 출자자(이하 예정출자자를 포함한다) 구성 및 그 지분율은 <별표00>(○○주식회사 출자자 및 지분율)과 같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이하 예정출자지분 포함한다)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 규모가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 기업 포함)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⁴³⁾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출자자 간 합병에 의한 지분율 변경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합병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준공시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의 출자지분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출자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출자가 곤란한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⁴⁴⁾⁴⁵⁾

제 75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⁴⁶⁾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Refinancing)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 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추진시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간 중 자본구조 변경시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운영기간중 자본구조 변경 시에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은 자금재조달 당시 감사보고서상 관리운영권 잔액의 1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43) 실제 실시협약 체결시 5% 미만의 자가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출자자구성의 적정성 평가에서 별도의 배점을 받은 경우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44) 변경시 해양수산부의 정책, 제3자제안공고상의 사업시행자의 자격, 평가기준, 변경될 출자자의 기존 사업계획 이행능력 등이 사전에 검토된다.

45) 출자자 변경의 신청은 주간사 혹은 가칭 법인 명의를 아닌 모든 출자자의 명의 또는 모든 출자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6)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기간 내에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한다.

- ⑤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자금재조달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 ⑦ 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실시협약 변경이 이루어진 후 출자자변경 약정 또는 자금차입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주무관청에게(국가관리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⑧ 주무관청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실시협약과 그 조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자금재조달 이익의 재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변경 실시협약에 반영한다.

제 76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 ①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며, 협약 당사자간 이익 공유의 비율은 30:70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기대이익 증가분을 말한다. 기대이익 증가분은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로 인한 이익(본 협약체결 이후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가중평균자본비용 하락으로 발생한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의 기대이익 증가분)과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조기 배당효과와 타인자본의 조달 조건 변경 효과로 인하여 출자자의 경상투자 수익률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으로 구성된다.
- ③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측 공유이익을 사용료 인하 등⁴⁷⁾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자금재조달의 범위,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요건, 공유비율, 이익의 산정방법 및 기준시점, 이익의 사용처 및 사용시점 등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한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한 자금재조달 관련 세부지침 및 조건에 따른다.

47)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정부측 공유이익을 우선적으로 사용료 인하에 사용하되, 주무관청이 사용료 인하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수입보장 축소, 무상사용기간 단축 등 당해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조건 개선에 사용할 수 있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76 조의2 (자금재조달 여건 보고 및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 등)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매년 (00월 00일)에 주무관청에(국가관리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포함)에 출자자 또는 자본구조의 변경, 자금차입계약 조건의 변경 등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여부를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에 따라 보고도록 한다.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자금 차입 약정 체결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에 대하여 자금재조달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소명하도록 한다.

제 12 장 분쟁의 해결

제 77 조 (분쟁의 해결)⁴⁸⁾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분쟁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본다.
- ②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우선 지급금액은 지급되어야 할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④ 협약당사자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 합의하는 경우의 조문)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 체결 시 중재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별도의 중재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제77조의 2(중재)와 같은 조항을 사용하도록 한다. 중재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48) 당사자가 실시협약 체결시 중재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소송으로 분쟁해결 방식을 고려하는 경우

제 77조의2 (중 재)

- ① 제77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본 협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⁴⁹⁾.
- ②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하되, 각 당사자는 각자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⁵⁰⁾
- ③ 중재판정은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 13 장 기타 사항

제 78 조 (변경 실시협약의 체결과 재무 모델의 반영)

-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② 본 협약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실시협약 및 재무모델을 변경하도록 한다.
 1.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37조의 2(실시계획 승인 후 부대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제안한 부대사업 시행 계획을 주무관청이 승인하고, 이 부대사업 시행 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경우
 3. 제43조(운영비용) 제3항에 따라 협약 당사자가 운영비용의 현저한 증감을 이유로 사용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등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 운영비 변경 사유로

49) 국제 거래의 형태를 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라고 할 수 있다.

50) 당사자들이 단독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 : “중재판정부는 양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1인으로 구성한다.”라고 합의할 수 있다.

인정하는 경우

4. 제43조의 2(법인세법 변경시 처리)에 따라 법인세율 변경, 과세 관청의 손금 인정 확정 등 조세 관련 법령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경우
 5. 제63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따라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사 착수시기 연기, 공사기간의 연장,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연장 등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경우
 6. 제75조(자금재조달의 절차) 제4항 및 제76조(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에 따라 자금 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는 경우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재의 재무모델 및 변경이 필요한 사유, 변경의 조건, 변경 효과 등을 산출하는 근거와 함께 변경 재무모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무모델을 검토한 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주무관청이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무모델을 검토하여 동의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정하여 제출한 변경 재무모델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변경 재무모델을 첨부하여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 ⑥ 주무관청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민자적격성 재조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 변경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절차를 완료하도록 한다.

제 78 조의2 (본 협약 변경 제안 등)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변경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협약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을 통하여 사업수익성이 확보되는지의 여부 및 본 협약에 규정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 배분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본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 79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80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주무관청은 자신이나 그 자산 또는 수입에 대하여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본 협약에 따른 주무관청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통치행위 등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는 취소할 수 없다.

제 81 조 (일부무효)

특정 관할 법률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 법률과 본 협약상 또는 타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82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본 협약은 법률이나 관습에 함축되어 있는 보장, 조건이나 기타 보증, 협약당사자 간의 기타 약정, 또는 협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면 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이 이와 같이 배제되는 여하한 보장, 조건, 보증, 약정이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제 83 조 (정보공개 및 비밀유지)

-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의 내용을 민간투자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본 협약의 공개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후 공개하도록 한다.

③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중 누구도 다음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공개일에 서면 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6.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령과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또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시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③ 협약당사자는 선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
2. 협약당사자를 대리하는 외부설계사, 시공자, 고문이나 자문인
3.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관 및 그 자문인
4. 본 협약에 언급된 보험증서 또는 보험제안서상 보험자
5. 협약당사자의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하수급자
6. 기타 주무관청이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

④ 제3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 84 조 (통지)

① 본 협약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

주소 : 수신 :

전화 : 팩스 :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주소 : 수신 :

전화 : 팩스 :

- ②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약 상대방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본 통지는 협약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송달된 때”라 함은 우편인 경우는 직접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송 확인이 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통지가 송달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85 조 (언어)

-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모든 의사교환은 한국어로 한다.
- ② 본 협약은 한글본으로 작성되며, 한글 이외에 다른 언어로도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본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 86 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 87 조 (협약의 효력)

- ① 제6조에 의한 사업시행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의무는 동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 ②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③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 0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기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해양수산부 장관]
홍 길 동(서명)

[출자예정자]
00회사 대표 000(서명)

[출자예정자]⁵¹⁾
00회사 대표 000(서명)

51) 실시협약 체결 시점에는 실제 사업을 추진할 사업 시행 법인이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자예정자들이 공동으로 실시협약에 서명토록 하여 실시협약 체결 이후 사업 시행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출자예정자들에게 협약준수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실시협약 체결 이후 일부 출자예정자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협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시협약의 형해화(形骸化)를 예방하고자 한다.

